

보도설명자료

(’20. 1. 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❶독일·벨기에 등 유럽국은 원전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 중,
❷국내 원전이용률 하락은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
일수 증가에 기인, ❸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
(매일경제 1.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독일·벨기에 등 유럽 국가는 원전감축을 지속 추진 중으로, 최근 유럽의회의 결의안이 유럽연합내 각국의 원전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- ◇ 국내 원전이용률 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격납건물 첩판부식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에 기인
- ◇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으로, 미국에서는 경제성 악화로 인해 원전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
- ◇ 1월 3일 매일경제 <놀라운 원전의 힘... 석탄화력 대비 전력생산 300만배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당초 원자력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(EU) 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꿨음
-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국내 원전 가동률이 65.9%로 하락
-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발전원 중 가장 경제적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① 독일·벨기에 등 유럽연합국의 원전 감축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

- 동 기사는 “당초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꾸었다”고 설명하면서,
 - ‘유럽의회가 원자력 발전이 기후목표 달성 등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’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
- 그러나, 이 결의안은 ‘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’는 것과 더불어 ‘원전 폐기물에 대한 우려’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
 - 유럽연합내의 원자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지만 유럽 연합내 각국의 원전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
 - 독일·벨기에 등은 원전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

< 유럽의회 결의안 59호 >

Believes that nuclear energy can play a role in meeting climate objectives because it does not emit greenhouse gases, and can also ensure a significant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in Europe; considers nevertheless that, because of the waste it produces, this energy requires a medium- and long-term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echnological advances (laser, fusion, etc) aimed at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entire sector;

- 따라서 “당초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(EU)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꿨다”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② 국내 원전 이용률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과거 부실시공 등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에 기인한 것임

- '18년 국내 원전의 이용률이 하락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 아니라,

- 격납건물 철판부식(9기)·콘크리트 결함(13기) 등 지난 정부시기인 '16.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 일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

* 원전 정지일수 : ('17) 2,565일 → ('18) 2,917일, 원전이용률 : ('17) 71.2% → ('18) 65.9%

③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으로, 미국에서는 경제성 악화로 인해 원전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함

□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이며, 경제성 악화로 인한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

- 미국에서는 경제성 저하로 '17년 신규원전 2기(V.C. Summer #2·3)의 건설이 중단되었으며, '13년 이후 총 9기의 원전이 조기폐쇄 되었음

- 또한, 미국 내 일부 주*에서는 가동원전의 조기폐쇄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

* 보조금 도입 주(州) : 뉴욕, 일리노이, 코네티컷, 뉴저지, 오하이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 장(044-203-5320)
 송정훈 사무관(044-203-5326)
 이수연 사무관(044-203-5322)